

#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

(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835
----------	------

발의년월일 : 2016. 5. .

발 의 자 :

## ☐ 주 문

- 붙임 “건의안” 과 같음.

## ☐ 제안이유

-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지역이 안산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언론에서 ‘안산 대부도(토막) 살인사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76만 안산시민이 불안에 떨고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과 생명의 도시 안산을 하루아침에 강력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등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함.
-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그 날의 참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는 사건의 명칭에 단순히 ‘안산’ 의 지명을 갖다 붙이고 있음.
-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임.
-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는 언론기관의 필연적 사명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언론보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다 할 수 없음.
- 이에 76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에 지명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는 단순히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도시 자체를 관광, 비즈니스, 쇼핑, 문화와 예술의 향유, 주거 등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판촉하기 위한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세상을 경악시키는 강력범죄 사건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이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지명을 사용하는 보도 행태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14년~20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평균 범죄는 180만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살인 등 강력범죄는 2만 6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언론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이름은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꼭 포함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보도 기사를 쓸 때에 지켜야 하는 육하원칙(5W1H)에 ‘어디서(Wher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보도 시점에 언론이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대서특필되는 언론 보도 명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사건·사고의 전말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후부터는 단순히 지명을 사용하여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죄 행위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건을 명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사고의 헤드라인에 지명을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언론과 방송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건의 명칭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며, 특히나 강력범죄의 명칭에 지명이 들어갈 경우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건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해당 지역으로 전이되어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피해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수원시가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명칭을 '오원춘

사건'으로 변경해 달라며 수원지검을 비롯해 경기지방  
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각 언론사 등에 요청한 일이 있었으며  
화성시는 20대 여교사 실종사건이나 2009년 부녀자 납치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명 사용 자제와  
'살인의 추억'과 연계한 부정적인 이미지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명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역사와 생활양식, 가치관이 투영되는 등  
그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조성호 사건'의 경우 안산시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도 아니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에서 안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한 76만 안산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과  
생명의 도시 안산을 하루아침에 강력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등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부도의  
살아있는 생태계를 테마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세월호 참사 이후 가뜰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처럼  
저성장과 아울러 장기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다. 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현실을 언론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사건의 참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건의 명칭에 단순히 ‘안산’의 지명을 갖다 붙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의 답습이다.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는 언론기관의 필연적 사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과관계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이에 76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에 지명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5.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